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수출규제 해제

日정부 '무역관리 개정안' 의결
다음달 21일부터 시행
정부 "양국 신뢰 완전히 회복"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양국 정상의 '톱다운' 방식 해결인 셈이다.

한일 협상에 밝은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나서 큰 방향을 정리한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진에 협상을 맡긴 방식이었다면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앞으로 여러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셔틀 정상외교 재개로 한일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격한 갈등을 빚어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일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장·차관 인사 검증 학폭 조사 집중"

대통령실은 장·차관 인사 대상자들을 검증하면서 본인과 자녀 등의 학교폭력 전력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같은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교폭력 전력에 대해서 구두로 질의했다"며 "사후 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허위로 답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고지했다"고 말했다.

기존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에서는 본인과 가족이 당사자인 민사·행정소송 유무만 질의했으나, 이번 인사를 앞두고 학교폭력 관련 질의를 추가한 것이다.

조만간 공개될 새로운 질문서에도 학교폭력 관련 질의들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학교폭력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판결문을 제공받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충돌해 법원 측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경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증받으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 사실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이 특보 아들 사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를 검증 과정에서 탈락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번 검증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의식, 장·차관 후보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文정권, 사드 환경평가 의도적 지연…윗선 개입 밝혀야"

국힘,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당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이나 책임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등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질질 끌고 발표하지 않았던 것은 팩트"라며 "어디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가로막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사드 전자파(가) 지금 다 엉터리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았는가"라며 "국민을 속인 것이고, 한마디로 정치 쇼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예방 '정순신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 학생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게끔 회의 결과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